

여수에 탄소 포집·활용기술 실증센터 구축

280억원 투입 2026년 본격 운영
기업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기술 상용화 탄소중립 선도 기대

여수에 탄소중립을 선도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CCU) 실증지원센터가 들어선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공모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선정됐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을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이산화탄소 화학적 전환 통합기술 실증설비와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등을 갖춘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또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해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친환경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 지원 체계를 갖추면서, 실증 장비 교육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은 도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공정 개선, 탄소 저감형 기술개발, 탄소중립형 신산업 전환 등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 해와 달

리, 국내에선 대부분 기초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 원천기술에 대한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실증 기반과 지원이 부족해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도내 기업들도 대규모 연구비 소요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환기술 개발, 기술상용화 실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플랫폼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광양만권은 국내 최대 석유화

학단지과 화학·철강 등 대규모 탄소배출 산업이 밀집해, 실증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도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실증을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술 상용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2024년 문을 열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센터를 활용해 탄소중립 기술개발, 공정혁신 등 탄소중립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ی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동부지역 주민소통 열린 강좌 전남도 동부지역분부는 지난 8일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도내 동부지역 어르신 200명을 모시고 제14회 동부지역 주민소통 열린 강좌를 열었다. /전남도 동부지역분부 제공

경제위기 극복 '광주민생경제대책본부' 가동

유관기관 등 16개 기관 참여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민생경제대책본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민생경제대책본부는 광주시,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16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간 합동기구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3중고로 인한 경제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민생경제대책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해 광주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경제 관련 부서, 광주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관별 추진상황과 대책본부 세부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또 현재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각종 사업발굴에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공공물가 인상을 억제하고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57억원을 투입해 공공물가 억제, 경제안전망 강화, 지역경제지지를 위한 소비 촉진 등 3개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한다. /김용현 기자

무안 부군수에 김성훈 전남도 사회재난과장

전남도는 10일 "‘별장 농막’ 논란을 불러일으켜 감사를 받는 무안부군수 A씨를 전남도로 복귀 조치하고 총무과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무안군과 협의를 거쳐 A씨 후임으로 전남도 김성훈 사회재난과장(사진)을 무안 부군수로 임명했다. A씨는 무안부군수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부인 명의로 사들인 밭에

올해부터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농막을 설치하고 조경이 가미된 소나무·바위·잔디밭 조성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신임 김성훈 부군수는 신안 출신으로 1987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무안군 읍남면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실 등에서 근무했다. 2013년 전남도에 전입해



희망인재육성과장, 회계과장, 사회재난과장을 역임했다. 무안군과 전남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업무 처리가 깔끔하고 조직 내 소통도 원활해 전남도와 무안군 간 가교역할을 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선우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이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NAVER 검색하기 학원114 등쳐보여

조류충돌 저감사업 지원 대상 공모

시, 29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방음벽에 조류가 충돌해 부상하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류충돌 저감사업'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 10일 국립생태원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 등의 증가로 전

국에서 하루 2만마리 정도가 조류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4월 광역시 최초로 조류충돌 저감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광주시는 조류충돌 저감 추가 지원을 위해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조류충돌 피해 인원이 많거나 지역의 대표성 및 홍보효과가 큰 곳을 8월초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은 면적 1,200㎡ 이내에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건축물과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와 점유자 등이며, 접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29일까지 시 기후환경정책과로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현 기자

정기 브리핑

신정훈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압류금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0일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

애인 보조견 및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 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생활속 불편을 더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동반자나 가족의 일



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압류는 시대적 요구이며 필요 이상의 가혹한 조치”라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김원이, 전남도와 목포 현안사업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2023년도 목포시 주요 현안 사업 점검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논의한 2023년도 목포시 주요 현안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계속) ▲목포 노후역사 개량 사업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신속 추진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등 총 17건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박 부지사와 전라남도 국립과대대학 설립 및 자신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제정 등 정책 건의에 대해 서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최근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호남선 KTX



증편 및 목포역 대개조, 관광용 트램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만큼 전남도가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하며 “논의된 목포시 주요 핵심 사업들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